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국 및 대외관계 전망

교 수 조 양 현

1. 제2차 아베 내각 출범을 보는 시각

가. 일본 정치의 총체적 보수화

- 지난 12월 총선에서 기존의 자민당과 일본유신의회(日本維新の會), 모두의 당(みんなの党) 등의 보수우익 성향의 신생 정당이 약진하여 일본 정치의 총체적 보수화가 현저해짐.
 - 중도보수의 집권 민주당은 참패하고, 사민당 등이 존립 위기에 처함으로써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진보·혁신 진영의 몰락을 가속화함.
 -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으로 가시화 되었던 양당제적 구도가 약화되고, 일본 정치권이 보수연합을 축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음.
- 금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경기부양과 실업대책 등 민생 현안이었지만, 제2차 아베(安倍) 내각은 국가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보수주의적 이념을 제도화하는 이른바 ‘정체성의 정치’를 추구할 것으로 보임.
 - 향후 보수세력 주도의 안정 정권이 탄생할 경우, 역사 미화, 영토주권 및 애국심 교육 강화, 평화헌법 개정 등의 보통국가화를 향한 제도적 정비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음.

<목 차>

1. 제2차 아베 내각
출범을 보는 시각
2. 아베 내각의 이념노선
및 정국 전망
3. 대외관계 전망
4. 한·일관계 전망
5. 고려사항

아베 내각이
퇴행적 역사인식과
영토문제에
집착할 경우,
독도,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대립이
재연될 소지...

- 반면, 강력한 정치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외관계의 전략성을 중시하여 미일동맹을 축으로 안정된 주변국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민주당 정부 후기에 가속화한 외교현안의 정치 쟁점화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음.

나.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동북아 질서

- 자민당의 총선 공약에는 신헌법 제정을 통한 자위권, ‘국방군’의 보유(자위대의 군대화),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베 내각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동북아 안보질서의 유동화가 우려됨.
- 민주당 정권 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러시아와 영토분쟁, 중국의 군사력 확장 및 일본 근해에서 중국 해군의 훈련 증가 등 동아시아 안보질서가 불안정해지자, 일본에서 ‘강한 외교,’ ‘주장하는 외교’ 등의 보수 담론이 힘을 얻음.
- 야당 시절의 자민당은 민주당 정부의 ‘외교 실패’를 비판하고,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해 왔던바, 향후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될 경우,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음.

다. 한일관계에의 영향

- 이명박 정부 말기에 한·일관계가 냉각되었던 바, 한일 양국의 신정부 출범이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관심사임.
- 한편에서는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대표적인 보수 인사라는 점을 근거로 한·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권 교체를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음.
- 아베 내각이 퇴행적 역사인식과 영토 문제에 집착할 경우, 독도,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대립이 재연될 소지가 다분함. 반면, 아베 내각이 동아시아 파워 구도 속에서 일본의 국익 확보를 우선할 경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여 안정된 한·일관계를 추구할 가능성도 있음.

2. 아베 내각의 이념노선 및 정국 전망

가. 제2차 아베 내각의 이념노선

- 아베 내각의 이념노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한 이른바 ‘보통국가론’의 연장선상에 있음.
 - 1990년대 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대규모 자연재해, 잦은 내각 교체와 정치 불안, 중국의 부상과 일·중의 경제력 역전,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북한의 도발에 따른 지역질서 불안정 등으로 일본 국민은 자신감을 상실하고 안보 위기감을 느꼈음.
 - 이를 배경으로 일본의 국가전략에서 미일동맹 강화 및 헌법 개정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공헌과 군사력의 보유를 주장하는 ‘보통국가’ 노선이 정착하였고,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국수주의적인 주장이 확산됨.
- 아베는 2006년 제1차 아베 내각 출범에 즈음하여 최초의 전후 세대 출신 총리로서 스스로의 정권 창출을 ‘전후체제로부터의 새로운 출범(戦後レジームからの新たな船出)’이라고 정의한 바 있음.¹⁾
 - 전후 일본의 국가 체제는 연합국의 점령정책에 의해 ‘강요된’ 것이며, 그 상징적 존재가 바로 ‘평화헌법’임. 아베 정권의 항해(航海)는 이러한 전후체제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국민들 스스로가 일본인인 것을 비하하지 않고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의 기초를 일본 ‘스스로가 세우는’ 작업임. 이 항해의 해도(海圖)는 일본의 역사, 전통, 문화 등인 바, 그 목적지인 ‘아름다운 나라’는 결국 고유한 전통에 기반한 국가임.
 - “일본은 아름다운 자연, 유구한 역사,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인식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베는 천황제를 비롯한 일본 고유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 그리고 정책 제안에 있어서도 전전(戰前)의 역사와 결부된 “국가=악”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을 제시함.

아베는
최초의
전후 세대 출신
총리로서
2006년 당시의
정권 창출을
‘전후체제로부터의
새로운 출범’이라고
정의...

1) 줄고 “아베 정권의 출범과 한·일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6.9.29).

- 제2차 아베 내각의 이념노선은 제1차 아베 내각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제1차 내각 하에서 추구되었던 ‘정체성의 정치’가 다시 시도될 것으로 보임.
- 지난 12월 총선에 즈음하여 아베는 「새로운 나라를 향해 - 전후 역사로부터 일본이라는 나라를 되찾고 싶다(新しい國へ——戦後の歴史から日本という國を取り戻したい)」라는 글을 기고하여 정권구상을 밝혔던바, ‘일본을 되찾는 것(日本を取り戻す)’은 단순히 자민당의 여당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전통을 되찾아 일본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²⁾
- 아베의 정권 구상은 대내적으로는 헌법개정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교육개혁, 자위대의 군대화, 국가위기 관리체제의 강화, 대외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를 통한 미일동맹의 강화, ‘강한 일본’의 건설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2013년 7월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는
향후 5년간의
일본 정치의
향배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

나. 정국 및 국내정책 전망

- 2013년 7월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는 향후 5년간의 일본 정치의 향배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인바, 아베 내각은 그때까지 경기 및 고용 대책 위주의 ‘안전운전’에 치중하면서 야당과 사안별로 협조하는 ‘부분연합’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 지난 12월 총선 결과에 따라 자민·공명의 연립내각이 출범하여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의원 여소야대’(ねじれ國會) 상황에는 변함이 없는데, 아베 내각에 의한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는 한계가 있음.
- 아베 총재 스스로 이번 정권을 ‘위기돌파 내각’이라고 명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자민당 지도부는 오는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통한 안정적인 정권기반 구축에 대한 집념이 강함.
- 제2차 아베 내각의 주요 각료와 총리관저 보좌관에 전직 각료나 총리 경험자 등의 중량급 인사와 아베의 측근이 임명된 것은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우선한 조치로 해석됨.

2) 安倍晋三 「新しい國へ——戦後の歴史から日本という國を取り戻したい」 『文藝春秋』(2013年 新年特別号).

-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내각은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만큼, 2013년 상반기에는 경기대책을 위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2013년도 예산안편성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금융완화를 위한 일본은행과의 협력 강화, 국회의원 정족수 삭감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아베 총리는 내각 출범에 즈음하여 “경제재생, 부흥, 위기관리에 전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모든 각료가 참여하는 ‘일본경제재생회의’의 설치를 발표함. 또한 아소 타로(麻生太郎) 전 총리를 부총리에 임명하여 재무상·금융상을 겸하게 하고, 신설된 경제재생상(經濟再生相)에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전 경제산업상을 임명한바, 이는 경제부흥에 대한 아베 내각의 정책 우선도를 대변함.
 - 지난 총선에서 자민당은 향후 10년간 사회간접자본에 총 200조 엔을 투자하는 ‘국토강인화’ 계획을 제시함. 물가상승률의 목표를 2%에 설정하고, 정부와 일본은행 간 협조에 의한 대담한 금융완화조치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여 명목 3%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다는 것임. 이를 위해 아베 내각은 10조엔 이상 규모의 2012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2013년 이후에도 적극 재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임.
 - 이와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과 인위적인 인플레이 조작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경우, 공공사업 확대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재정건전화 조치의 지체, 엔화의 중장기적 약세 및 일본 국채금리의 급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한다면 2016년까지 안정적인 정권운영이 가능할 것인바, 보수 이념의 제도화를 통한 국가체제의 정비가 추진될 수 있음.
 - 아베 내각은 헌법개정, 집단적 자위권 등 외교안보정책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가입 문제 등 국내적으로 찬반이 갈려서 해결에 정치력이 필요한 문제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룰 공산이 큼.
 -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아베 내각이 일본

2013년
상반기에는
경기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유신의회, 모두의 당 등 보수세력과 연대하여 헌법개정, 자위대의 군대화,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의 외교안보 관련 핵심 현안을 처리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음.

- 반면 자민당이 선거에 패배할 경우, 종래와 같은 ‘결정을 못하는 정치(決められない政治)’ 즉, 정치 불안정이 재연될 수 있음.

3. 대외관계 전망

가. 대외관계 설정의 현실적 변용

- 탈냉전 이후 일본 사회에서 ‘강한 외교,’ ‘주장하는 외교’ 등의 보수 담론과 군사적 보통국가화의 주장이 확산되어 왔던바, 아베 내각 하에서 이러한 방향성은 유지·강화될 것임.
 - 1990년대 이후 일본은 미일동맹의 재편·강화를 통한 방위력의 확충 및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를 추구해 왔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강화, 유지되어 왔음.
 - 2000년대 들어 자민당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 좋다”는 ‘대미일변도외교’(고이즈미 내각), 미·일관계와 아시아 외교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명외교’(후쿠다 내각), 미일동맹 중심으로 하면서 가치 체계를 공유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추구하는 ‘가치관외교’(아소 내각)를 추구함.
 - 2009년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기지이전문제, 영토문제,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미·일, 일·중, 한·일관계에 긴장이 흐르면서, 자주 외교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주장하는 우익의 목소리가 힘을 얻음.
 - 향후 안정된 정권 기반을 가진 보수정권이 들어설 경우,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향한 제도화 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큼.
- 다만 2013년 참의원 선거까지는 아베 내각이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면서 대외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치중할 것으로 보이는바, 과거사나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대결국면을 피하고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외관계 경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됨.

2013년
참의원 선거까지는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면서
대외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치중할 것...

- 아베는 지난 총선까지는 미일동맹관계를 우선시하고 영토 주권, 역사 교육을 강조하여 한국, 중국 등 주변국에 자극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지만, 총선 승리 이후에는 아시아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이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피하고자 하는 현실주의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내각관방 참여(參與)로 기용된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전 외무성 사무차관은 대표적인 미일동맹파이지만, 아베 총리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센카쿠에 공무원 상주와 '독도의 날' 행사의 정부행사로의 격상에 대해 외교적 실리를 이유로 반대함.

미일 양국은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 간
역할분담을
재조정하고,
TPP 가입문제를
논의할 것...

나. 미일동맹 강화

- 향후 미일 양국은 후텐마 기지이전 난항, 미군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레) 오키나와 배치, 주일미군 범죄 다발 등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재개정을 통해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동적 방위력과 남서방면 방위력 강화를 위해 미·일 간 역할분담을 재조정하고, 일본의 TPP 가입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하토야마 정부가 추구한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관계' 즉, 미일 동맹의 상대화 노력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좌초되었고, 2010년과 2012년에 발생한 북한의 서해 도발과 일·중, 일·러 간 영토 분쟁 등은 일본 국민들에게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키는 계기가 됨.
- 아베 내각은 미일동맹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자위권 용인을 추진할 가능성이 큼. 제1차 아베 내각 하에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조직되었는데(2008년 6월, 그 용인을 권고하는 보고서 제출), 향후 이러한 모임을 재조직하여 헌법해석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큼.
- 일본의 TPP 가입 문제는 경제적 연대를 통한 중국 견제라는 효과가 있지만, 일본 내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큰 바, 이 문제가 2013년 참의원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일·중 간
센카쿠 분쟁이
전면대결로
확대되는 것은
양국 모두
바라는 바가
아니며...

다. 일·중 간 경쟁적 협력 관계

- 탈냉전 이후 일·중관계는 경제 관계와 정치·안보 관계의 괴리라는 ‘정냉경열(政冷經熱)’이 심화되어 왔지만, 2012년 양국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일·중 간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센카쿠 문제의 안정적 관리에 합의할 수 있다면,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경쟁적 협력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임.
 - 21세기 들어 일·중 간에는 역사인식, 해양·영토 문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투명성 문제, 대만 문제, 인권, 환경,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지역협력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전략적 경쟁 구도가 선명해짐. 특히 2010년과 2012년의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사건을 계기로 일·중관계는 크게 악화되었고, 일본 보수세력은 센카쿠열도의 실효지배 강화를 위한 영해경비 강화 및 방위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 그렇지만 일·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센카쿠 분쟁이 전면대결로 확대되는 것은 양국 모두 바라는 바가 아닌바, 최근 아베 내각은 중국에의 특사 파견 등 일·중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음.

라. 북일 수교의 난항

- 전통적으로 일본은 한반도 정세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영향력 확대를 추구해 왔던바, 1990년대 들어 북·일 간 수교 교섭이 개시되었지만, 핵·미사일 및 납치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은 대립함.
 - 2008년 6월과 8월에 북·일 양국은 실무 협의를 거쳐 북한이 납치자 문제를 재조사하고, 일본은 대북 제재조치의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본이 대북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고 북한이 북·미 대화를 우선함으로써, 합의 사항이 실현되지 않은 채 북·일 대화는 중단됨.
- 아베 내각 하에서도 일본 정부는 핵, 미사일, 납치 문제와 북일 수교의 일괄 해결이라는 기존의 대북한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임.
 - 한반도 주변 주요국의 권력 이행을 전후하여 한·미·일 3국 공조체제 와해를 위한 북한의 강온 양면의 공세가 예상되는바,

최근 북·일 양국은 4년여 만에 국장급 회담을 재개하여 상호 관심사를 논의함.

- 그렇지만 북한이 납치문제 관련 획기적인 양보를 하거나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한, 일본 정부가 북·일 교섭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음.

4. 한·일관계 전망

가. 갈등 요인 상존 속 신중한 관계개선 모색

- 아베 내각은 보수적 이념 성향이 두드러지는바, 한·일관계에는 과거사 및 영토 관련 마찰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아베 내각이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고노(河野) 담화, 무라야마(村山) 담화, 간(菅) 담화 등 역대 일본 정부의 역사 관련 사죄와 반성을 변경하려 하거나, 교과서 기술 관련 ‘근린 제국(近隣諸國) 조항’의 변경을 시도한다면,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될 것임.
 - 21세기 들어 일본의 영토정책은 내각의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비타협적인 대응이 두드러진바, 2013년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의 검정 결과나 정부 간행물이 발표될 가능성이 큼.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합의 제소 및 조정 제안을 시도하거나 독도 분쟁화를 위한 국내외적 홍보를 강화할 경우, 한·일관계의 경색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특히 한국의 신정부 출범 직전에 아베 내각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2월 22일)를 정부 행사로 격상한다면, 한·일관계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임.
- 아베 내각의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설정에 보이는 현실주의적 배려는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인바, 내각 초기에는 최대한 역사·영토 관련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대응이 예상됨.
 - 중국이 미일동맹 강화, 센카쿠 문제 관련 일본의 ‘우경화’와

아베 내각
초기에는
최대한
역사·영토 관련
한국을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한·일 양국은
당분간 적극적인
관계 개선보다는
정치·외교 마찰의
최소화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며...

퇴행적 역사관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악화는
일본 외교에 큰 부담임.

- 최근 중국 부상의 견제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일관계
소원에 따른 한미일 공조의 와해를 방지하는 것이 미일 양국의
공통된 전략적 인식인바, 아베 내각은 안정된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큼.

나. 정치외교 마찰의 관리

- 그렇지만 양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기
에는 이르며, 한일의 상호인식과 정치 일정을 감안한다면, 양국은
당분간 적극적인 관계 개선보다는 정치·외교 마찰의 최소화
에 치중할 가능성이 큼.
 -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이야말로
한·일관계의 기본임을 거듭 강조해 왔으나, 이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여전히 좁혀져 있지 않음.
 -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동북아의 화해 협력과 평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일본 등 주변국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아베 내각의
전향적인 역사인식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2013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일본의 여야 정치가들의
자극적인 언행으로 한·일관계가 훼손될 소지가 있음.
 - 한편 탈냉전 이후 대미 및 대중 관계 설정에 나타난 한일의
입장 차이는 양국의 전략적 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대북 정책에 있어서 아베 내각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시하여 대화보다는 압박을 우선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차기 한국 정부가 대북 접근을 강화할 경우, 한·일 간 대북
정책 공조의 필요성이 커질 것임.
-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일본의 정치 구도가 명확
해질 때까지는 본격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 선거의 결과, 일본 정국이 다시 불안정해지거나, 반대로 자민당이 안정적인 정권 기반 구축에 성공하여 군사적, 이념적 보통국가화에 매진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과급될 수 있음.

5. 고려사항

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과도한 기대 경계

- 과거에 한일 양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구하였지만, 결국은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됨.
 - 이는 한·일관계가 양국의 정치가 개인 혹은 정권 차원을 넘어선 보다 구조적인 요인에 좌우되고 있음을 의미함.
- 양국의 리더십 교체를 전후한 지나친 낙관론은 오히려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으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과도한 의욕과 목표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좌절과 실망을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함.
 - 과거사·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무리한 정책을 피하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마이너스 출발”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전략적 발상이 필요.
 - 특히 2013년 참의원 선거 이후의 일본 정국 동향 및 대외관계를 주시 관찰하면서 우리의 대일 입장을 정해나가는 신중한 접근법이 요구됨.

나. 한일 간 외교 현안의 포괄적인 관리체제 마련

- 과거사·영토 관련 현안과 기타 현안을 ‘분리 대응’하되, ‘재발·악화 방지’를 위한 관리 차원의 노력과 역사인식의 공유라는 ‘완치’를 위한 장기 처방을 병행하는 노력이 요구됨.
 - 한일 간에는 역사문제 외에도 북한문제, 경제협력, 지역협력, 테러·국제범죄, 환경·에너지 문제, 민간교류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음. 이들 문제를 역사문제와는 별도로 처리해 나가려는 노력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과도한
의욕과 목표는
더 많은
좌절과 실망을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

즉, 역사문제 관련 대립과 마찰의 다른 분야로의 과급을 최소화 하려는 접근이 중요함.

- 양국 외교 당국 간의 차관급 전략회의, 청와대와 총리관저의 외교안보 브레인을 포함한 민관합동 전략회의 등의 다양한 대화채널과 협의체를 확보하고, 특히 아베 총리 및 주변 정치가 들과의 인맥 구축에 주력해야 함.

다. 한일 간 중장기 미래비전 공유

한일 양국이
지역질서 차원에서
한·일관계의 전략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의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한국은 미국을
지역안정 세력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

-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 지역질서 차원에서 한·일관계의 전략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시장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하는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는 21세기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지역 공공재로서의 의미를 가짐.
-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 한국은 북한 및 통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양국 사회에 확대시켜 나가야 함.
- 양국이 안정적인 지역 및 세계 질서의 구축·유지라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같이 모색해 나갈 때, 과거사·독도 관련 양자 갈등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라. 견고한 한미동맹의 유지

-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해서 한국은 미국을 지역안정 세력으로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 일본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국익, 세력균형, 패권 등 현실주의 국제관계관과 근대 국가적 가치체계가 우선하는 동북아에서 ‘영토 내셔널리즘’이 확산될 경우 지역질서의 안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바, 역내의 퇴행적 역사인식이나 영토 민족주의 발호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함.
- 1990년대 이후 추구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가 아베 내각 하

에서 가속화할 경우, 이는 동아시아 안보질서와 관련하여 이중성이 내재되어 있음.

-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일본의 건설적인 지역적 관여가 기대되는 한편,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일본의 방위력의 정비는 주변국들을 자극하여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음.
-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지역안보질서의 유동성 증대에 대비해야 함.

2012. 12. 27

토론: 부	장	박재현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진창수
	동북아국 심의관	이상덕
편집: 책임연구원		김혜림